

#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전후 ‘불령선인’을 둘러싼 언설과 시책

강 경 자\*

(e-mail : keiko84@daum.net)

## < 목 차 >

- |                           |                                       |
|---------------------------|---------------------------------------|
| 1. 들어가기                   | 3. 관동대지진 전후 ‘불령선인’을 향한 언설과 시책         |
| 2. ‘불령선인’ 언설의 등장과 그 실체    | 3.1. 관동대지진 전 ‘불령선인’을 둘러싼 정부의 탄압과 시책   |
| 2.1. ‘불령선인’ 언설의 등장과 그 배경  | 3.2. 관동대지진 직후 ‘불령선인’을 둘러싼 유언 비어와 말살정책 |
| 2.2. 공문서를 통해 본 ‘불령선인’의 실체 | 4. 나가기                                |

키워드 : 關東大震災(Great Kanto Earthquake), 朝鮮人虐殺(Massacre of Koreans), 不逞鮮人(criminal Korean), 流言飛語(groundless rumor), 習志野収容所(Narashino Camp)

## 1. 들어가기

본 논문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의 주요 표적이자 키워드가 된 ‘불령선인’을 둘러싼 언설과 이들을 향한 일본 제국의 시책을 고찰함으로써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관동대지진 후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1923년 12월 14일 중의원 본회의 다부찌 도요키치(田淵豊吉)를 비롯하여 2019년 2월 26일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에 의한 문제제기에 이르기까지 국가 차

\* 영산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일본학(일본정치)

원에서의 진상조사 및 정부차원에서의 책임인정, 사죄에 대한 촉구가 일본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일본변호사 연합회의 인권옹호위원회에서도 2003 <관동대지진 인권구제신청 사건 조사보고서> 및 <권고서>를 통해,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 차원에서의 실태조사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 및 인권단체의 수많은 문제제기와 보고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 및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 아베정권 하에서는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사죄는 커녕 유감의 뜻을 표명할 의사조차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sup>1)</sup> 또한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발맞추어 2017년 8월 25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 도지사는 스미다구(墨田区) 요코아미 공원의 조선인 희생자 추모식에 더 이상 추도사를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하였다. 1973년 이후 매해 이루어져 왔던 조선인 희생자 추모식에는 도의회 차원의 참여의 의미로 도쿄 도지사가 추도사를 보내왔었다. 그러나 고이케 도지사는 추도사 송부를 거부함으로써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테러리스트처럼 난동을 부린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학살’이라고 할 수 없다는 역사날조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다.<sup>2)</sup>

본 논문은 이와같은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주 표적이 되었던 ‘불령선인’을 중심으로 한 언설과 시책을 중심으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재고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시책 속에 군대와 경찰이 어떻게 직·간접적으로 대학살 사건에 관여, 주도하였는지를 추적해 가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그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많은 연구가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인 학살의 주 표적이 된 ‘불령

1)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syuisyo/193/touh/t193091.htm> 第193回国会(常会) “お尋ねの「歴代政府が遺憾の意を表明したこと」については、調査した限りにおいては確認できず、御指摘の「関東大震災時における朝鮮人、中国人等の虐殺事件に日本政府が関与したこと」について、調査した限りでは、政府内にその事実関係を把握することのできる記録が見当たらないことから、「遺憾の意を表明」する予定はない”(검색일: 2020.03.23.)

2) 工藤美代子(2009)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の真実』産経新聞出版. 「震災に乗じて朝鮮の民族独立運動家たちが計画した不穏な行動は、やがて事実の欠片もない『流言蜚語』であるかのように伝えられてきた。(略) 何の罪もない者を殺害したとされる『朝鮮人虐殺』は、はたして本当にあったのか。日本人は途方もない謀略宣伝の渦に吞まれ、そう信じ込まされてきたのではあるまいか」(加藤康男『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はなかった!』p.20.) 加藤康男(2014)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はなかった!』、WAC. 등.

선인’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sup>3)</sup> 조엘 매튜(Joel Matthews)는 일본 식민지배 하 조선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면서 이들에 대한 지배와 감시, 그리고 처벌 및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게 된 과정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매튜의 연구를 포함하여 ‘불령선인’이라는 단어가 표상하는 언설이 어떻게 식민지 조선과 일본 사회에서 생산 유포되었는지, 또한 관동대지진이라고 하는 초유의 긴급 재난상황 속에서 ‘불령선인’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떠한 유연비어로 재생산되어 무차별 조선인 학살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는지 그 경로와 일본 정부의 시책을 면밀히 살펴본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본 논문은 이와같은 선행연구의 공백을 메꾸면서, 일본 정부의 공권력이 여론 형성 및 시책을 통해 어떻게 조선인 학살 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했었는지 학살사건의 전모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 2. ‘불령선인’ 언설의 등장과 그 실체

### 2.1. ‘불령선인’ 언설의 등장과 그 배경

‘불령선인(不逞鮮人)’이란 “불평이나 불만을 품고 제 마음대로 행동” 한다는 뜻의 ‘불령’이란 단어에 ‘조선인’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단어로써, ‘불평 불만을 품고 불량하게 다니는 조선인’이란 뜻을 가진 말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

3) 국내외 관동대지진 관련 대표적 연구자들로는 강덕상, 야마다쇼지(山田昭次), 다나카 마사타카(田中正敬), 김인덕, 김광열, 강효숙 노주은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의 연구실적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강덕상(2013) 「한일관계에서 본 관동대지진」, 강덕상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 강효숙(2013) 「관동대진계 당시 피학살 조선인과 가해자에 대한 일고찰」, 강효숙(2015) 「1923년 관동지역 조선인학살 관련 향후 연구에 대한 고찰-일본협(日弁協)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김광열, 「관동대지진 시에 학살당한 한인과 중국인의 사후조치 고찰-피해자 보상을 위한 입론」; 김인덕(1993) 「제일운동사 속의 1923년 조선인 학살」, 김인덕(2010) 「제일조선인과 관동대지진에 대한 연구 및 서술 경향」, 김인덕(2013) 「한국 역사교육 속의 제일조선인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김인덕(2015)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과 조일 운동세력의 동향」; 노주은(2007) 「관동대지진과 조선총독부의 제일조선인 정책-총독부의 ‘震災処理’ 과정을 중심으로」, 노주은(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연구의 성과와 과제: 관동대지진 85주년에 즈음하여」, 노주은(2013) 「동아시아 근대사의 ‘공백’-관동대지진 시기 조선인 학살 연구」; 다나카 마사타카(2013) 「전후 일본의 역 사교육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야마다 쇼지(2013) 「일본 민중은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학살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늘날 일본 의 정치적·사상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야마다 쇼지(2008)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사전에는 “일제 강점기에,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 한국 사람을 이르던 말” 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불령선인’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어떻게 생산, 유포되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공문서에 이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11년 03월 30일의 문건 <간도 및 훈춘지방(間島 및 琿春地方) 일반의 상황에 관한 건> (문서번호 憲機 제626호)이라는 공문서이다. 이 공문서는 간도 헌병대위 요시다(吉田)가 외무대신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郎)에게 보낸 것으로서, 이 공문서의 시기를 기초로 생각해볼 때 ‘불령선인’이란 단어는 한일병탄 이후 1910년대 초기부터 생산, 유통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불령선인’ 단어를 둘러싼 언설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파괴적이며 범죄적인 조선인의 이미지”<sup>4)</sup>를 형성하였는지, 사회학자 이마무라 도모(今村鞆)는 “단두대 형틀에 끌어내어 말살시키고 싶은 단어”로서 ‘불령선인’을 들고 있다. 그는 “만약 이 단어가 없었다면 (관동)대지진 때의 불상사는 경미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 단어가 “잠재적 군중심리를 작동시켜 기성사회에 해독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처음에는 배일선인(排日鮮人)이라고 하는 문자를 사용했었으나 이토총감이 배일선인이라는 말을 매우 싫어하여 공문에 이 문자를 쓰는 것을 금하였고, 이 때문에 경무국의 누군가가 ‘불령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다.”<sup>5)</sup> 고 밝히고 있다.

이마무라의 글에 따르면 ‘배일선인’이라는 말이 ‘불령선인’이라는 말로 치환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일선인’과 ‘불령선인’의 의미 및 이미지, 표상의 차이는 무엇인가? ‘배일(排日)’이란 일본 사람이나 일본의 문화, 정치, 사상 따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일선인’이란 일본의 문물, 사상, 언어, 정치 따위를 배척하는 조선인을 뜻한다. 이 단어에는 조선인 자신의 정체성 및 가치 기준에 따라 일본을 배척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 이 외에 특별히 파생되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없다. 이에 반해 ‘불령선인’이란 불만을 품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반사회적이고 불온한 조선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여기에는 온당하지 못한 불량하고 불쾌한 범죄자와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다.

4) Joel Matthews(2017) Historicizing “Korean Criminality”: Colonial Criminality in Twentieth Century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2(1), p.17.

5) 今村鞆(1930) 『歴史民俗朝鮮漫談』南山吟社, pp.389-390.

이는 실제로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일본재주조선인관련기사검색(戰前日本在住朝鮮人關係新聞記事検索)(1868-1945)>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일본 신문에서는 1913년경부터 '불령선인(不逞鮮人)'이란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sup>6)</sup>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문지상에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19년경부터이다. 이 당시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불령선인'에 관한 이미지는 반사회적인 선동가, 테러리스트와 같은 이미지의 범죄자들이다. 예를 들어 1919년 4월 25일자 오사카 마이니치(大阪毎日) 신문 기사에는 “불령선인의 잠입/ 전 교토대학생 안(安), 임(林) 2명, 내지의 조선인 노동자를 선동함/ 오사카후에 잠복한 흔적있음(不逞鮮人の潛入/元京大学生安、林二名、内地の鮮人労働者を扇動す/大阪府に潜伏せる形跡あり)”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온다. 기사 제목만으로도 '불령선인'이란 일본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불량한 범죄자, 테러리스트와 같은 '요주의 인물'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함께 일본 사회 속에 유통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이미지가 만들어낸 사회적 통념 및 선입견은 관동대지진 당시 절대적인 증거의 여부에 관계없이 광범위한 조선인 살인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sup>7)</sup>

'불량선인'의 당시 사회적 통념, 개념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통용되었던 '충량한 신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반대어와 같은 이미지로 유통되었던 '불량선인'의 뜻을 살펴보면 된다. 당시 일본제국이 국가적 교육 목표의 일환으로 양성해내고자 했던 제국의 충량한 국민상, '충량한 신민'의 이미지와 대비해 볼 때 '불량선인'의 사회적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하 조선에는 1911년 8월 23일 '조선교육령'이 공포되었다. '조선교육령'은 아직 세상물정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 일본 황실에 대한 존경 의식을 배양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는 문제의식 하에 입안된 것이었다. '조선교육령'은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의 취지에 따라 충량한 국민을 육성함을 본의로 한다.”(제2조) 고 명기하고 있듯이 '교육칙어' 정신에 입각하여 조선인을 천황의 '충량한 신민'으로 양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메이지 천황이 1890년 공포한 교육칙어는 천황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강조하는 교육이념으로서 일본제국의

6) <http://www.zinbun.kyoto-u.ac.jp/~mizna/cgi-bin/shinbun/research.cgi> <戰前日本在住朝鮮人關係新聞記事検索 1868-1945> (검색일: 2020.04.12.)

7) 전개서, Joel Matthews(2017) p.20.

신민(臣民)은 천황에게 충효(忠孝)를 다하는, ‘충량한 신민’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교육칙어의 이념에 따라 조선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핵심 역시 천황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하여 ‘충량한 신민’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국체이데올로기로 성립된 근대 일본제국의 교육이념이자 통치이념의 핵심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물이야말로 일본 제국이 필요로 했던 국민상이었다. ‘불령선인’은 이와 같은 국민상에 반대되는 인물상으로서, 이와같은 식민지 이념과 천황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는 조선인들을 ‘불령선인’으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을 정당화하였던 것이다.<sup>8)</sup>

이렇게 볼 때 당시 사회에서 ‘불령선인’이라 낙인찍혀야 했던 인물들은 어떤 이들이었는지 유추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일본 제국의 통치 이념에 항거하며, 조선의 독립과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며, 독립운동이나 독립 사상을 고취한 인물들이 일본제국이 요주의 인물로 낙인찍혔던 ‘불령선인’들이었던 것이다.

## 2.2. 공문서를 통해 본 ‘불령선인’의 실체

‘불령선인’이란 단어가 실제 어떤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었는지, ‘불령선인’의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 당시 공문서에 기록된 ‘불령선인’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역사 자료 속 일본외무성 문서를 기초로 하여 ‘불령선인’의 단어를 살펴보면 일본 외무성 자료 문건에서 ‘불령선인’이란 단어는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이란 이름으로 수집되어 있으며 총 2573개에 달하였다.<sup>9)</sup>

이중 ‘불령선인’이 등장하는 첫 문건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간도 및 훈춘지방(間島 및 琿春地方) 일반의 상황에 관한 건> 이라는 공문서이다. 이 문서에서 ‘불령선인’을 언급한 부분만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 一. 一般ノ賊情 (1. 일반 도적의 내부 사정)

8) 박진우(2007) 「천황제이데올로기와 식민지조선-1910~20년대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26집, 일본사학회, p.205.

9) [http://db.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sort=&dir=&limit=20&page=1&pre\\_page=1&setId=2573&totalCount=2573&kristalProtocol](http://db.history.go.kr/search/searchResultList.do?sort=&dir=&limit=20&page=1&pre_page=1&setId=2573&totalCount=2573&kristalProtocol) (검색일: 2020.04.20.)

.不逞鮮人ノ一部ハ陰ニ排日鼓吹ヲナシ..不逞鮮人ハ露領及米国等ノ排日者ト氣脉ヲ通シ陰ニ國權回復等ヲ唱ヘ愚民ヲ煽動スルカ如キ形跡アルハ事實ナリ (불령선인의 일부는 배후에서 배일고취를 하고..불령선인은 러시아 영토 및 미국등의 배일자들과 내통하면서 배후에서 국권회복등을 주창하면서 우민을 선동하는 것과 같은 흔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五. 宗教ノ狀況 종교상황

間島内ニ於ケル耶蘇教ハ漸次信者増加シツ.アリ..彼等ハ表面上何等排日主義者ニアラサルカ如イ裝ヒ居ルモ裏面ニ於テハ種種排日の秘密談ヲナシツ.アル形迹カリ ....排日主義ノ鼓吹ニ努力スヘキ傾向アリ (간도내에서의 기독교는 점차 신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아무런 배일주의자들과 관계없는 것처럼 하지만 이면에는 종종 배일적 비밀담을 나누는 흔적이 있다... 배일주의 고취에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불령선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일본외무성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불령선인’이라고 지칭한 무리들, 소위 ‘불령단 관계 인물’로 분류된 자들은 일본에게 침탈당한 국권 회복을 위해 일하는 독립운동가, 일찍이 기독교 사상을 통해 식민 통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반일사상을 고취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이는 2573건에 이르는 문서 속에 나오는 ‘불령선인’으로 지목된 자들의 이름, 조직단체명들을 통해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초기 공문서에는 ‘배일선인(排日鮮人)’과 ‘불령선인’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배일선인(排日鮮人)’이라는 단어와 ‘불령선인’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문건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0)</sup>

예를 들어 발신일 1917년 07월 20일의 문서제목 <배일선인처분방침(排日鮮人処分方針)에 관한 건> (문서번호 機密送 제26호)은 이동휘(李東輝) 석방운동에 관한 사건을 다룬 공문서이다. 이 문서에는 “배일선인 중 이동휘라는 자(排日鮮人中ノ李東輝ナルモノ)”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동휘는 1911년 북간도로 망명, 상해 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한말 애국계몽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을 펼친 인물이다. 또한 1919년 12월 27일 <상해임시정부 등 불령선인(上海臨時政府 등 不逞鮮人)

10) 1911년 05월 04일 <블라디보스토크지방 排日鮮人 및 暴徒의 동정에 관한 건을 시작으로 하여 1921년 06월 14일 <배일선인유력자명부 이동에 관한 건> (機密送 제100호)을 마지막으로 하여 이후에는 ‘불령선인’이라는 단어로 통일되어 있으나, 21년까지 불령선인과 배일선인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의 동정에 관한 건〉(電報 捕斬 제2224호) 문건 속에는 이승만을 ‘불령선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조선총독부 경부총장이 1920년 06월 02일 외무차관에게 보낸 문서 〈유력한 불령선인의 동정(不逞鮮人の 動靜)〉(高警 제16507호)에서는 유력한 ‘불령선인’으로 문창범(文昌範), 박용만(朴容萬), 유동열(柳東說), 신채호(申采浩), 고창일(高昌一)등을 지목하고 있다. 문창범은 대한국민의회 의장,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총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고 박용만은 신한민보 주필이자 한성임시정부 외무총장 등을 역임한 독립운동가이다. 유동열은 항일 비밀 결사단체 신민회를 조직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인물로서 임시정부의 참모총장 등을 지낸 독립운동가이다. 고창일은 일제강점기 파리강화회의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한 독립운동가이며, 신채호는 일제강점기 언론, 교육, 신민회 활동으로 계몽운동을 전개한 민족주의적 사학자이자 국권회복을 위해 힘쓴 독립운동가이다.

이처럼 여러 공문서를 통해 일본제국이 ‘불령선인’ 혹은 ‘배일선인’으로 지목한 이들은 국권회복을 위해 민족계몽, 해방운동을 펼친 독립운동가, 반일 민족운동가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문서제목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불령단관계잡건’의 문서 중에는 〈주된 불령선인에 관한 조사보고 건(재만 민족운동가의 경력과 주소지에 대한 보고) 문서번호 기밀 53호〉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다. 이 문서 제목을 통해서도 당시 만주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던 민족운동가들을 ‘불령선인’으로 특별 감시, 경계해 왔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공문서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단체나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배일선인유력자명부 이동(異動)에 관한 건〉(1921년 06월 04일) 문건 속에는 국민회, 대한북로사령부, 북로독군부, 신한촌야소교회, 선인기독교청년회, 상해가정부(대한민국임시정부)등 독립운동 및 기독교단체 등 대한독립군단과 관련된 단체, 조직들이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1923년도 8월 1일자 문건 〈암살사상 보급의 목적으로써 불령선인이 거행했던 암살극에 관한 건〉에는 상기 언급된 인물 및 단체들 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불령선인’ 관련 사건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3.1운동, 무관학교, 이등박문 처단사건, 독립선언서, 훈춘사건 등이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불령선인’이란 일본 제국의 국체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저항하였던 독립운동가, 민족운동가, 사회참여적 기독교단체에 속한



조선인들을 ‘불령선인’으로 낙인찍고 이들에 대한 억압과 탄압을 정당화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불령선인’들의 사회적 활동 범위와 영향력이 확대될수록 일본 정부의 이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은 심화되었다. 이하 일본 정부의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시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관동대지진 전후 ‘불령선인’을 향한 언설과 시책

#### 3.1. 관동대지진 전 ‘불령선인’을 둘러싼 정부의 탄압과 시책

관동대지진 발생 전 일본 정부의 ‘불령선인’을 둘러싼 정책은 1919년 3.1운동 전까지 대부분 감시와 경계, 체포 및 훈계 등에 머문 것이었다. 1916년 05월 24일 외무대신 이시이 기쿠지로(石井菊次郎)가 사토 나오다케(佐藤尙武) 하얼빈 총영사대리에게 보낸 <배일선인(排日鮮人)의 처분에 관하여 러시아측(露国側)에 교섭의 건> 이라고 하는 문건에는 배일선인(불령선인)에 대한 처벌방침을 교섭하는 내용이 나온다. 내용을 보면 시베리아 지역에 거주하는 ‘불령선인’들에 대한 감시를 통해 연해주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불령선인’과의 교통하는 길을 막고, 러시아 법령에 따라 이들을 처벌하는 방침을 훈계하도록 교섭하는 내용이 나온다.<sup>11)</sup>

그러나 3.1운동은 ‘불령선인’에 대한 일제의 대응을 강압적 검거와 소탕, 학살의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어 놓았다. 이는 일본 정부의 「조선통치의 방침」이라는 새로운 지침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불령선인’에 대한 새로운 방침에 대해 아래와 같은 기술이 나온다.

..상해, 만주, 시베리아에 거주하는 불령선인은 모든 방법으로써 조선내지의 양민을 선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검제<sup>12)</sup>하지 아니하면 조선의 소요를

11) 帝国官憲ニ於テ之ヲ引取リ得ル様措置方ヲ要求シ若シ露国政府ニ於テ此等鮮人中同国ニ歸化セル者ニ對シテハ右ノ措置ヲ執ルコト能ハサル旨ヲ主張スルニ於テハ之ヲ西比利亞奧地ニ移住セシメ警察監視ノ下ニ置キ沿海州其他ノ地方ニ在ル不良鮮人ト交通ノ途ヲ絶ツハ勿論露国法令ニ依リ同国及親交国間ノ国交ヲ阻害スル行為又ハ親交国ノ領土ヲ侵犯セントスル行為等ニ出ツル者ニ對シ之ヲ取締リ又処罰スルコトヲ得ルニ於テハ右法令ニ照ラン相当ノ処分ヲ爲サシムルコトヲ要求スヘキ旨訓令シ又今回露国側ニ於テ手入開始ノ報ニ接シタルニ付此好機ヲ逸セス上掲ノ趣旨ニヨリ我希望ヲ貫徹スル様露国当局ニ交渉方重ネテ在露大使ニ訓令致シタル次第

12) 말에 재갈을 물린다는 뜻으로,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얽매고 억누름’을 이르는 말.

근절할 수 없다. 이들은 속히 그 소굴을 소탕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기타의 선인에 대하여는 일층 보호를 가하고 황화에 균점하는 도를 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에는 당분 아래의 방법을 실시하고자 하는 희망을 유한다.<sup>13)</sup>

이처럼 3·1운동 이후 ‘불령선인’을 향한 일제의 시책은 완전한 말살정책, 소탕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조선총독은 조선 국내 3.1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일본 본국으로부터 6개 대대의 지원군을 받아 전국요지에 배치하고 무자비한 탄압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4월 15일에는 「치안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제정하여 시위운동에 가담하는 자는 10년 징역에 처할 것이라고 공포하였다.<sup>14)</sup>

또한 3·1운동 이후 북간도 지역에서는 3·13만세 시위운동 등이 일어나면서, 독립군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조선군 사령관 우쓰노 미야타로(宇都宮太郎)는 1919년 9월 12일 제19사단장과 제20사단장에게 “대불령선인작전에 관한 훈령(對不逞鮮人作戰에 관한 훈령)”을 내리고 동년 9월 19사단의 국경 수비부대 병력을 증강, 국경을 폐쇄하였다.<sup>15)</sup> 이 모든 것은 <간도지역불령선인초토계획>(1920년 8월 15일 경성회의에서 결정)을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이어 9월 1일에는 「재외불령선인박멸책(在外不逞鮮人撲滅策)」을 수립하여 이들 19사단과 기병 20사단 2만명의 정규군을 출동시켜 불령선인에 대한 무차별 즉결처형, 조선인 학살을 자행하였다. 이른바 “경신년대토벌”, “경신참변”이라고 불리는 만주지역 조선인 학살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불령선인 초토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마을을 포격하고 남아 있는 집은 모조리 불태우고 살아있는 사람은 생매장하거나 불 속에 던져 죽이는, 너무나도 끔찍한 조선인 학살이 연출되었다.<sup>16)</sup> ‘불령선인초토화, 박멸책’이라는 계획 속에 만주지역 4개 현(연길, 화룡, 왕청, 훈춘)에서 5,058명이 체포되고 3,500여명이 피살되었으며, 28개 교회당, 36개소의 사립학교가 불에 탔거나 혹은 파괴되었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은 이와같은 ‘불령선인박멸책’과 같은 ‘불령선인’초토화, 말살시책의 연장선 속에서 바라볼 수 있다. 독립운동가, 민족주의자,

13) 韓国研究院所藏 마이크로필름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868~1945. Accession No. 27, sp.44, pp.1-7.

14) 大正 8年 制令 第7号 第1条: 政治의 變革을 목적으로 하여 多數共同하여 安寧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하려고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禁錮에 처한다.

15) 조원기(2012)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p.203-234.

16) 조동걸(1998) 「1920년간도참변의실상」 『역사비평』 통권45호, 역사비평사, pp.47-52.

사회운동에 적극적이었던 교회관계자들에 대한 소탕작전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면밀하게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유추하기에 충분하다.

### 3.2. 관동대지진 직후 불령선인을 둘러싼 유언비어와 말살정책

관동대지진 전 일제의 ‘불령선인’을 향한 언설과 말살정책을 바라볼 때 1923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은 이와 같은 일제의 정책 기조에 기초해서 재고해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불령선인’을 둘러싼 유언비어의 유포, 확산 과정과 지진 직후의 계엄령 선포 및 3일 동안 이루어진 군, 경찰에 의한 조선인학살 시책을 살펴보면 3.1운동 이후 자행되었던 “불령선인초토화작전”과의 연계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자연 재해 혼란 속 자경단과 같은 민간인들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대지진을 좋은 기회로 삼아 ‘불령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확산, 선동하여, ‘불령선인’을 말살하고자 한 일본 정부의 고의성이 농후한 사건이다. 강효숙의 지적과 같이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은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진 전대미문의 “제노사이드”와 같은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17)</sup>

우선 ‘불령선인’이라고 하는 학살의 키워드가 된 유언비어의 진과 경로를 볼 때, 대지진의 소동을 빌미로 ‘불령선인’들을 소탕하고자 한 일본 정부의 의도적 허위 정보의 확산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야마다쇼지(山田昭次)는 여러 사료들에 기초하여 관청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자경단 결성을 부추겨 조선인 학살을 유도한 것을 입증하였다.<sup>18)</sup> 일본 내각부 중앙방재회의의 <1923관동대지진보고서> 역시 군대와 경찰, 신문이 유언비의 전파에 기여하였으며, “군과 경찰에 의한 조선인 살상”이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sup>19)</sup> 야마다는 경시청에서 간행한 『다이쇼대진화재지(大正大震火災誌)』(1925)와 금병동(琴秉洞)에 의해 수집 편찬된 『관동대진재조선인학살문제관계사료(關東大震災朝鮮人虐殺問題關係史料)』 자료들을 통해 경찰이 앞장서서 사람들에서 적극 유포한 사료를 제시하고 있다. 야마다는 이들 사료에 기초하여 대지진 발생 당일 저녁 순사가 집으로 직접 찾아와 “불령선인이 쳐들어온다” “각 곳에서 불령선인이

17) 강효숙(2015) 「1923년 관동지역 조선인학살 관련 향후 연구에 대한 고찰-일변협(日弁協)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북사학』 47호, 진북사학회, p.276.

18) 야마다쇼지(2008) 이진희 역 『조선인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pp.18-20.

19) [http://www.bousai.go.jp/kyoiku/kyokun/kyoukunnokeishou/rep/1923\\_kanto\\_daishinsai\\_2/index.htm](http://www.bousai.go.jp/kyoiku/kyokun/kyoukunnokeishou/rep/1923_kanto_daishinsai_2/index.htm)  
1 「1923關東大震災【第2編】」(p.207-224.) (검색일: 2020.04.23.)

살인과 방화를 저지르고 있으니 조심하라” “폭탄 흥기를 가진 불령선인이 습격”해왔으니 문단속을 잘해야 한다거나, “진부터 일본에 불평을 품고 있던 불령선인이 때를 맞추어 폭동을 일으키고자 하던 참에 대지진이 일어나자 시내 각처에서 방화를 일삼고 있다” 는 유언비어들이 관헌들에 의해 전해졌다는 내용들의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sup>20)</sup>

무엇보다 9월 2일 내무성 경보국장이 각 지방 장관 앞으로 타전한 전보문의 내용과 사이타마현 내무부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장 앞으로 보낸 지령 〈불령선인 폭동에 관한 건〉의 내용에는 공통적으로 이번 재해 속 “불령선인의 망동”에 대한 경계와 단속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sup>21)</sup>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불령선인, 조선인에 의한 폭동, 래습 등의 유언비어의 생산, 유포의 시발점이 일본 정부기관이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sup>22)</sup> 선행연구는 당시 일본의 경찰과 군부 혹은 언론이 조선인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조장하고 조선인 학살에 직접, 간접으로 가담했음을 밝혀왔다.

두 번째로 대지진 다음 날인 9월 2일에 공포된 계엄령은 대지진의 혼란 속 ‘불령선인’을 제거하고자 한 일본 군대의 움직임과 그 궤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계엄령은 전쟁 혹은 사변시 군대의 힘으로 전국 혹은 지방을 경계하는 법으로서, 한마디로 비상시 군에 의한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한 지배를 의미하는 비상법(非常法)을 의미한다.<sup>23)</sup> 그런데 이 계엄령 발표 동기가 ‘조선인의 폭동설’ 때문이며, 시행 목적 중 하나가 ‘불령스러운 움직임으로부터 이재자를 보호’하는 것, 계엄령 공포 당일부터 군대에 의한 ‘불령선인’ 학살이 시작되었다는 것 등은 지진 직후 일본 정부의 문제의식과 구체적 방책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원래 계엄령 발표는 긴급 칙령이기 때문에 “추밀원 고문의 자문”을 얻어 “관보에 실어 공포”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진 후 공포된 계엄령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계엄령 공포와 함께 군대의 신속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내각회의에서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

20) 야마다쇼지(2008) 이진혁 역 『조선인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pp.100-105.

21) 전계서, 야마다쇼지(2008) pp.105-107.

22) 노윤선(2018) 「일본지진을 통해 바라본 혐한(Anti-Korea(n) Sentiment)과 혐오 발언(Hate Speech)에 대한 고찰 - 관동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을 중심으로 -」 『일본근대학연구』 60호, 한국일본근대학회, pp.237-250.

23) 일본의 경우는 1882년의 8월 5일 태정관 포고 제36호 로서 제정되었고, 제1조에 “계엄령은 전시 혹은 사변 시의 병비(兵備)로서 전국 혹은 한 지방을 경계하는 법이다”라고 규정하였다.

하고 아카이케 경시총감의 주장에 의해 계엄령을 결정하고, 바로 9월 2일 계엄령을 선포하였다.<sup>24)</sup>

9월 2일 계엄령이 공포와 함께 일본 경시청은 바로 '조선인보호의 방침'을 발표하고<sup>25)</sup> 치바(千葉)현 나라시노(習志野)의 포로수용소로 조선인들을 호송하였다.<sup>26)</sup> 일본 정부는 '조선인 보호방침'이라는 명목하에 3200여명의 조선인들을 나라시노 강제수용소에 연행하는 한편, 나라시노(習志野) 기병 제15연대를 '폭동을 일으킨 조선인을 진압' 하기 위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보냈다. 조선인 '보호'를 위해서 9월 5일에 나라시노에 개설된 수용소에서는 '보호'라는 공적인 목적과는 정반대로 군대가 수용자의 사상 조사를 해서 선별된 조선인들을 살해하고, 자경단들에게도 살해 하도록 했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sup>27)</sup>

죽음의 수용소 나라시노에서는 '불령선인' 조선인들이 이들 군대에 의해, 또한 자경단들에 의해 학살당했다. 왜 이러한 학살 사건이 계엄령 공포와 함께 일어나야 했는지 <조선인문제에 관한 협정> 이라고 하는 극비문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 제2. 조선인의 폭행 또는 폭행 기도 사실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이 점을 시인하게 하는데 노력할 것. 또 다음과 같은 사항에 힘쓸 것. ① 풍문을 철저히 조사해 되도록 사실이라고 인정하도록 힘쓸 것. ② 풍문 선전의 근거를 충분히 조사할 것” 즉 이는 조선인 폭동, 방화 독약투입 과 같은 풍문이 유언비어가 아닌 사실이라고 날조하도록 의도한 것이었다.<sup>28)</sup>

뿐만 아니라 경시청에서는 형사들을 나라시노에 파견하여 요시찰 조선인의 언동을 정찰, 경시청 검사국과 협력하여 각 기관이 '불령선인'이란 명목으로 수상한 자를 연행, 사상조사와 잔혹한 추궁, 학살이 이어졌다. 9월 4일 계엄사령부는 조선인 폭동설이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고 계엄방침을 수정한 날임에도 불구하고 나라시노에서는 25일까지 '불령선인'을 모조리 처리하는 방침을 수정하지 않았다.<sup>29)</sup>

24) 강덕상(2005)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pp.43-50.

25)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公文別録・内閣・大正十二年～昭和十九年・第一巻・大正十二年～昭和八年／震災ニ付テノ処置ヲ為スコノ件(A03023581000)」 (<https://www.digital.archives.go.jp/das/image/M000000000000169829> 검색일: 2020.04.27.)

26) 조경희(2017) 「관동대지진 전후 제국일본의 조선인 대책과 사회사업 사상-내선융화' 사업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제128집, 대구사학회, p.10.

27) 다나카 마사타카(2015)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일본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8호, 동북아역사재단, pp.108-109.

28) 전계서, 강덕상(2005) pp.297-298.

29) 전계서, 강덕상(2005) p.301.

결국 나라시노는 ‘피의 포로수용소’가 되어 많은 조선인들이 ‘불령선인’이라고 하는 낙인 속에 군과 자경단에 의해 학살당해야 했다. 나라시노 포로수용소의 피해자 수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으로 희생된 모든 조선인의 수에 비하면 크지 않을 수 있으나, 철저한 ‘불령선인’ 소탕 작전으로 수행된 일본 정부의 인식과 시책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 4. 나가기

본 논문은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전후 ‘불령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언설과 시책을 고찰함으로써 대지진이라고 하는 특별재난상황을 이용해 배일주의 민족주의자들을 완전히 말살시키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의 전모를 재고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불령선인’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어떻게 생산 유포되어 사회 속에서 어떠한 이미지, 표상을 가지고 소비되었는지 살펴보았으며, 철저하게 고증하고 검증하는 시좌에 서서, 외무성 문건과 같은 공문서 내용 및 각의결의 계엄령등의 당시 시책을 통해 관동대지진의 조선인학살 사건을 재구성하여 재조명하였다.

그 결과 일본 제국이 요주의 인물로 경계하고 탄압하였던 ‘불령선인’들은 민족주의운동가, 독립운동가, 계몽가, 임시정부관계 정치인들이 대다수 이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일본 식민체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일본의 국체이데올로기에 순응하지 않고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을 하는 자들이었다.

1919년 3.1운동 및 훈춘사건을 통해 이들 불령선인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말살정책을 펼쳐온 일본 정부는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자 이를 계기로 ‘불령선인’ 말살을 위한 조선인 학살을 자행하게 된다. 이는 대지진 직후 유포한 유언비어의 과정과 내용 및 곧이어 공포한 계엄령의 내용과 목적, 이에 따른 군, 경의 움직임, 조선인보호방침과 같은 칙례 및 나라시노 포로수용소에서의 학살사건 등 일련의 정부 방침 및 시책은 모두 ‘불령선인’들을 말살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동대지진 전후의 일본 정부의 시책은 국체이데올로기에 기초하여 내지와 외지의 모든 국민들을 ‘충량한 신민’으로 만드는데 역점이 있었으며,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은 이와같은 일

본 제국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았던 ‘불령선인’들을 말살하기 위한 의도된 관, 군, 경의 합작 사건의 성격이 농후한 것을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현 시점에서의 문제는 대한의 민족주의 선각자들을 ‘불령선인’으로 몰아갔던 일본제국의 국제이데올로기가 아직도 일본 사회에 잔존한 채 극우정권의 네오내셔널리즘의 탈을 쓰고 일본식민지 시대를 미화하고, 일제의 식민정책 및 전쟁 범죄를 은폐, 왜곡 면죄하려고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경화된 일본 사회 속에서 오늘날에도 조선인학살을 연상케 하는 ‘불령선인’이란 단어가 헤이트스피치 속에 등장하고 있으며, 혐한 분위기 속에 극단적 인종차별주의적 언행이 공공연하게 발설되고 있다. 역사의 상흔이 현재의 한일관계 및 일본 내에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진상규명 및 일본 정부의 사죄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덕상(2005) 『학살의 기억, 관동대지진』 역사비평사, pp.43-50.  
 강효숙(2015) 「1923년 관동지역 조선인학살 관련 향후 연구에 대한 고찰-일본협(日弁協)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진북사학』 47호, 진북사학회, p.276.  
 노윤선(2018) 「일본지진을 통해 바라본 혐한(Anti-Korea(n) Sentiment)과 혐오 발언(Hate Speech)에 대한 고찰-관동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 연구』 60호, 한국일본근대학회, pp.237-250. (DOI: <http://dx.doi.org/10.16979/jma.k.60.201805.237>)  
 다나카 마사타카(2015)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연구의 과제와 전망-일본에서의 연구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48호, 동북아역사재단, pp.108-109.  
 박진우(2007) 「친황제이데올로기와 식민지조선-1910~20년대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26집, 일본사학회, p.205.  
 야마다쇼지(2008) 이진희 역 『조선인학살에 대한 일본 국가와 민중의 책임』 논형, pp.18-20.  
 조경희(2017) 「관동대지진 전후 제국일본의 조선인 대책과 사회사업 사상-‘내선용화’ 사업을 중심으로」 『대구사학』 제128집, 대구사학회, p.10. (DOI: <http://dx.doi.org/10.17751/DHR.128.73>)  
 조동걸(1998) 「1920년 간도참변의 실상」 『역사비평』 통권45호, 역사비평사, pp.47-52.  
 조원기(2012)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집,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pp.203-234. (DOI: <http://dx.doi.org/10.15799/kimos.2012.41.005>)  
 今村 鞆(1930) 『歴史民俗朝鮮漫談』 南山吟社, pp.389-390.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 「公文別録・内閣・大正十二年～昭和十九年・第一巻・大正十二年～昭和八年／震災ニ付テノ処置ヲ為スコノ件(A03023581000)」 <https://www.>

digital.archives.go.jp/das/image/M000000000000169829 (검색일: 2020.04.27.)

Joel Matthews(2017) Historicizing “Korean Criminality”:Colonial Criminality in Twentieth Century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22(1), p.17. (DOI: <https://doi.org/10.22372/ijkh.2017.22.1.11>)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868~1945. Accession No. 27, sp.44, pp.1-7.

논문 투고 일자 : 2020. 06. 27.
--------------------------

논문 심사 일자 : 2020. 07. 20.
--------------------------

게재 확정 일자 : 2020. 07. 24.
--------------------------



<要旨>

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前後「不逞鮮人」をめぐる言説と施策

康慶子

本考は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戦後'不逞鮮人'に対する日本政府の言説と施策を考察することで大地震という特別災難状況を利用して排日主義の民族主義者たちを抹殺しようとした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事件の全貌を再考したものである。'不逞鮮人'という言葉がいつからどのように生産流布され、社会のどのようなイメージで消費されたか窺い、徹底的に考証して検証するため、外務省文書及び戒厳令等の当時施策を通じ関東大震災朝鮮人虐殺事件を再考した。その結果'不逞鮮人'たちは民族主義運動家、独立運動家、啓蒙家、臨時政府関係の政治家が大多数であったことが確認できた。また大地震直後流布された流言蜚語の拡散過程及び内容、戒厳令の内容と目的、これによる軍、警官の動き、習志野捕虜収容所における虐殺事件など政府の方針および施策はすべて、'不逞鮮人'を抹殺することに、その焦点が当てら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

The Discourse and Policies over the “Criminal Koreans” before and after the Great Kanto Earthquake Massacre

Kang, Kyung-Ja

This paper is a reconsideration of the whole story of the massacre of the Korean people in the Great Kanto Earthquake by examining the discourse and polici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before and after the incident. The Japanese government used this catastrophe to annihilate Korean anti-Japanese nationalists. This paper looked at how the word 'Criminal Korean' was made and circulated and how it was used to represent certain images in the Japanese society.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documents of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an exhaustive inspection of the imposition of the Japanese martial law led to the reconstruction of the story of the massacre of the Korean people in the Great Kanto Earthquake.

It was confirmed that the majority of 'criminal Koreans' were nationalists, independent activists, and officer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content and the process of dispersal of groundless rumors right after the Great Earthquake, the content and purpose of the martial law, army and police movements after the imposition of the martial law, and the slaughter in the Narasino prison camp revealed that the policies and measures of the Japanese government were all focused on the annihilation of 'criminal Koreans'.